

한미정상회담 결과 분석

2013. 6

한미정상회담 결과 분석

2013. 6

김규륜(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

박영호(국제관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박재적(국제관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김장호(국제관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개요	1
II.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배경	3
1.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방향	3
2. 한·미 관계 강화 및 대북정책 공조	4
3.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	5
III. 박근혜 대통령 방미관련 주요내용	6
1. 한·미 정상회담	6
2. 박근혜 대통령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	9
IV. 성과와 의의	12
1. 성숙한 양국 관계 기반 ‘신뢰동맹’의 토대 구축	12
2.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한국의 위상 제고	12
3. 양국 지도자 간 상호 신뢰 형성	14
4.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 및 이해	14
5. ‘한반도 리스크’와 국민 불안감 제거	15
6.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 필요성 설득	16
V. 정책적 고려사항	17
<부록>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	20
Joint Declaration in Commemorat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the Allian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3

I. 개요

- 오바마 대통령은 박대통령 당선 직후 축하전화를 통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 양자 간 정상회담 개최를 제의함.
 - 이후 박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의 축하사절단으로 방한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마크 리퍼트 미 국방부 아태 차관보, 다니엘 러셀 백악관 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제임스 줌왈트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를 접견, 양국 간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지 확인

- 한국 신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도발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 간 정책기조에 대한 인식공유 및 조율을 위해 박대통령의 첫 해외순방 및 정상회담 개최지로 미국을 선택함.

- 2013년 2월 25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대북 정책추진의 핵심과제로 제시함.

-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5월 5일부터 9일까지 ‘신뢰에 기초한 한·미 동맹의 미래 설계’를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함.
 - 국민방문이 아닌 공식 실무방문이었지만 미국의 상하 양원 합동연설에 초청받는 등 최고의 예우

- 박근혜 대통령은 방미 일정 중 5월 6일부터 8일까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워싱턴을 공식 방문하여 한·미 정상회담 및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 등의 일정을 진행함.

-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과 오찬회동에서 한·미 동맹, 북핵·북한 문제, 양자 간 실질협력, 동북아 문제, 범세계적 협력 등에 대해 논의

o 본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와 오바마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배경을 검토하고,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 합의내용을 중심으로 정상회담의 성과와 의의를 분석하여 향후 한국의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II.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배경

1.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방향

- 힐러리 클린턴에 이어 국무장관을 맡은 존 케리가 과거 상원의원시절부터 유연한 대북정책을 추구해왔을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는 점에서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유화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됨.

- 미국에서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은 차기 선거에 대한 압박이 없고 두 번째 임기 동안 여론과 의회와 같은 외부적 환경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구체적으로 외교정책에 반영할 수 있음.
 - 경제문제를 비롯한 내정에서 단기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재선 대통령은 대부분 외교적 성과에 주력
 -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집권 2기였던 2000년 북미 공동 코뮤니케를 체결하고 미사일 협상을 진전시켰으며,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역시 2기 임기 동안 2007년 2·13 합의와 10·3 합의, 그리고 북한의 테러 지원국 명단 삭제 등의 조치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뚜렷한 의지를 표명

- 오바마 대통령도 2009년 취임 초기에 추진하려고 했던 북한의 비핵화 정책노선을 2기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외교적 성과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됨.

2. 한·미 관계 강화 및 대북정책 공조

-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1기 행정부는 지난 4년간 대북정책 공조를 통해 양국 간 굳건한 신뢰관계를 구축한 바 있음.
 - 한·미 양국은 2009년 4월 이후 2011년 10월까지 총 8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비롯한 양국의 현안에 대하여 논의, 굳건한 한·미 동맹 관계를 재확인

- 북한문제에 있어 한미 양국의 정책공조는 박근혜 정부와 미국의 오바마 2기 행정부 사이에서도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 양국 정상은 한·미·일 삼국 간 긴밀하고 확대된 협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외교적 협력이 사태 해결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인식을 공유
 - 미국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과 관련, 미국과 동맹국을 향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동맹국을 보호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동맹 방어에 대한 단호한 의지 천명

-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1기 행정부 사이의 대북정책 공조가 강경책으로 귀결되었다면, 박근혜 정부와 미국의 오바마 2기 행정부 사이의 정책공조는 유연하고 완화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한·미 양국의 동맹관계를 강조하는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의 신정부와 전혀 다른 방향의 대북 강경책을 제시하기보다는 한국과의 정책공조를 통해 유연한 입장에서 대북문제 해결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

3.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

- 오바마 2기 행정부는 새로이 출범하는 중국의 새 지도부와의 우호적인 관계설정을 위해 평화로운 한반도 안보환경을 추구하는 한편, 지난 4년간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시킨 한·미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의 신정부가 채택하는 대북정책과도 일정 수준 보조를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 제시한 새로운 외교전략인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과의 갈등보다는 협력을 택할 가능성이 큼.
-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대외적 환경을 고려, 집권 1기의 ‘전략적 인내’라는 강경책보다는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양면전략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북한과 관계개선을 시도하는 온건책으로 우회할 가능성이 있음.

Ⅲ. 박근혜 대통령 방미관련 주요내용

1. 한·미 정상회담

-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5월 7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정상회담과 오찬회동을 통해서 양국 관계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in Commemorat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the Allian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을 채택하였음.
- 포괄적 전략동맹인 한·미 동맹을 확고히 지지하고, 한·미 FTA 체결을 통해 안보·군사 동맹에 경제 동맹을 추가하였으며, 사회·문화·인적교류 등 제반분야의 협력도 심화시켜 나가기로 함.

〈한·미 동맹의 공고함 재확인〉

- 한·미 동맹이 아태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고 21세기 새로운 안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고 조정해 나갈 것을 다짐함.
- 확장억지, 재래식 및 핵 전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 사용을 포함한 확고한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재확인 함.

- 2009년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 중요한 진전이 있었음을 평가함.
 - 이에 기초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한편, 비핵화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

〈한·미 FTA 이행 결과 평가〉

- 한·미 FTA는 양국의 파트너십이 긍정적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구현함.
- 양국 간 교역과 투자 증대 등 한·미 FTA의 긍정적 성과를 평가하였음.
 - 한·미 양국에는 에너지 부문을 포함한 양국 간 협력 및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할 잠재력이 충분
- 한·미 FTA가 양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임.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와 한반도 평화·번영 증진 노력 지속〉

- 한·미 양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을 통하여 북한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토록 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하였음.

- 양국은 북한의 평화로운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6자회담 참가국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다짐함.
 - 북한이 고립에서 탈피하고,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양국은 북한의 도발로부터 양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노력을 다짐함.
 - 정보·감시·정찰 체계 연동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한 연합방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
- 양국은 북한이 주민들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투자와 개선노력을 기울이며,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함.

〈동북아 역내 및 글로벌 어젠다 협력방안 모색〉

-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양국이 당면한 도전에 공동 대응하고 동북아에서의 평화·협력시대 구축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함.
-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은 포괄적 전략동맹에서 동북아 지역과 전세계적 문제까지 함께 협력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격상됨.
 - 미국은 세계무대에서의 대한민국의 리더십과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

- 글로벌 어젠다인 기후변화, 청정에너지개발, 에너지안보, 인권, 인도적 지원, 개발지원협력, 테러리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원자력 안전, 비확산, 사이버안보, 해적퇴치 등에 있어 협력증진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한·미 양국 사회 간 긴밀한 관계 증진〉

- 경제계, 시민단체, 학계, 기타 유관기관들 간 협력을 포함, 양국 사회가 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임.

2. 박근혜 대통령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

- 박 대통령은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한·미 동맹 60년을 평가하고, 양국 관계가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격상된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소개하였음.
- 동 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①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 ②동북아 지역 평화협력체제 구축, 그리고 ③지구촌 평화와 번영에 기여를 골자로 하는 한·미 동맹 3대 비전을 제시하였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

-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힘.

- 북한의 핵은 절대 용납하지 않고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 하되, 영유아 등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상황과 관련 없이 진행
 - 남북한 간의 점진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축적해나감으로써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룩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
- 북한의 비핵화와 국민 삶의 개선을 촉구함.
- 북한은 핵보유와 경제발전의 동시 달성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세웠으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핵무기가 아니라 국민 삶의 증진과 행복임을 지적
- 비무장지대(DMZ)에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희망함.
- DMZ는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진정한’ 비무장 지대를 지향할 필요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유지해 나가면서 DMZ 내에 세계평화공원을 건설, 그곳에서 평화와 신뢰가 자라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

〈동북아 평화협력체제 구축〉

- 역사에 눈을 감는 자는 미래를 보지 못하고,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지 못하는 국가는 내일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함.
- 역내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미래 아시아에서의 새로운 질서는 정치·안보협력이 뒤처져 있는 소위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의 관리에 달려있음을 언급함.

- 아시아가 당면한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한 비전으로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을 추진할 것을 밝힘.
 -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이 환경, 재난구조, 원자력안전, 테러 대응 등 연성 이슈부터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고, 점차 다른 분야까지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는 동북아 다자간 대화 프로세스를 시작
 - 여기에는 북한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러한 구상은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정책 과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지구촌 평화에 기여〉

- 한·미 동맹은 지구촌의 이웃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함.
 - 한·미 동맹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
- 테러대응, 핵 비확산, 국제금융위기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서도 한·미 양국의 공조는 더욱 확대됨.
-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자유, 인권, 법치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확산하고, 빈곤 퇴치, 기후변화, 환경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대처하는데 있어 계속 함께할 것임.

IV. 성과와 의의

1. 성숙한 양국 관계 기반 ‘신뢰동맹’의 토대 구축

- ‘한·미 동맹 공동비전’(2009)을 위시한 기존 한·미 동맹관련 성명·선언보다 한반도 미래상, 경제협력, 양국 국민 관계, 동맹역할 확대 등에서 진일보한 한·미 동맹의 비전을 제시함.
 - 한·미 동맹이 ‘21세기 전략동맹’(2008년), ‘포괄적 전략동맹’(2009년), ‘다원적 전략동맹’(2011년) 등을 발전·심화시켜 ‘신뢰동맹’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확인
 - 제 47차 한·미 정상회담(2008년)에서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을 추구할 것임을 천명하는 등 양국은 정치·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영역으로 협력을 확대해 왔는데, 금번 회의에서는 확대된 제반 영역에서 양국 간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
 - 한·미 FTA 체결 후 개최된 제 56차 한·미 정상회담(2011년)에서 한·미 동맹의 영역을 기존의 군사·안보 분야에서 경제 분야로 확대하였는데, 금번 회의에서는 한·미 FTA의 온전한 이행을 통해 한·미 동맹의 공고화 추구

2.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한국의 위상 제고

- 동맹으로서 한국의 역할이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세계적 문제까지 확대됨으로써 미국과의 동맹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파트너’로 격상됨.

- 한·미 동맹의 영역을 글로벌 차원의 제반 비전통안보 이슈(기후변화, 청정에너지 개발, 인도적 지원, 인권, 개발지원, 테러대책, 해적 퇴치 등)까지 최대한 확대
- 양국 정상간 문서로는 처음으로 한·미 동맹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린치핀(linchpin)’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한·미 동맹이 미·일 동맹과 어깨를 견줄 만큼 굳건해졌음을 시사함.
 - 2008년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Foreign Affairs*지에 기고한 논문에서 일본을 ‘동맹국’으로, 한국을 ‘글로벌 파트너’로 언급한 것을 다수의 한국 언론이 미국이 한·미 동맹보다 미·일 동맹을 더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다고 오역하였던 에피소드와 대비
 - 미국이 한·미 동맹을 미국의 아·태지역 동맹체제의 북방축(northern anchor)인 미·일 동맹과 남방축(southern anchor)인 미·호 동맹 수준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의미
 - * 미국과 일본은 방위협력지침을 개정, ‘동적 방위력(dynamic defense force)’ 개념 등을 통해 미·일 동맹에 역내안정 역할 부여
 - * 미국과 호주는 미·호 동맹을 무역 및 개발 분야까지 포괄하는 다원적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사이버 영역까지 범주를 확대함은 물론, 아시아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한 미·호 동맹의 지역 차원의 역할에 대한 비전 공유

3. 양국 지도자 간 상호 신뢰 형성

- 박근혜 정부와 오바마 2기 정부의 출범 초기, 양국 정부는 향후 4년간 한·미 동맹·대북정책·글로벌 안보이슈 등에 긴밀히 공조할 수 있도록 정책협력의 신뢰 기반을 구축함.
 -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 등 자신의 한반도 정국 구상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이를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정책과 연계
- 과거 한국의 새 정부 출범 후, 한미 간 대북정책 등에서 혼선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금번 회의를 통해 양국 대통령이 교감과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이를 사전에 불식시킴.
 - 동맹의 운용에 있어 정상 간 ‘인식의 공유’ 및 친밀도는 매우 중요 (예를 들어, 부시 대통령 - 고이즈미 총리의 미·일 동맹, 이명박 대통령 -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 동맹 강화)

4.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 및 이해

- 신뢰형성과 비핵화의 선후관계 등 미국 내에서 제기되었던 의문을 설명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를 얻어냄.
 - 미국이 오바마 1기 ‘전략적 인내’ 전략을 고수해왔음을 고려할 때, 오바마 대통령이 ‘정확하고 옹근 접근’이라고 평가한 것은 양국의 신뢰프로세스 정책공조의 시발점

-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한국이 쥐고 전방위 외교를 펼치는 이른바 ‘한국 주도의 전방위 외교(Korea Initiative Diplomacy)’에 대해 양국이 공감
 - 미국이 직접 대북대화에 나서기보다는 한국이 대북정책 주도
- 동아시아 국가 간의 ‘아시아 패러독스’를 고려할 때, 지역 내 안보·경제 질서의 안정을 위해 모든 국가들이 비교적 동의하기 쉬운 연성 이슈부터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는 점을 미국이 이해함.
- 미국과 공조하여 중국, 나아가 북한의 참여를 독려

5. ‘한반도 리스크’와 국민 불안감 제거

-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연이은 도발성 발언에 따른 이른바 ‘한반도 리스크’와 국민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전달함.
- 위기를 만들고 양보를 얻어내는 패턴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고, 북한 비핵화를 단호하게 추진한다는 양국의 공동입장을 재천명
 - 미국은 확장억지력과 재래식 및 핵전력 사용을 포함한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
-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여 북한의 위협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함.
- 한국 정부는 전작권 전환의 전제조건인 대북억지력 확보를, 미국은 전환의 시기를 강조

- 향후 키리졸브,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등을 통해 전작권 전환 이후 군의 운용능력 점검 및 검증

6.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 필요성 설득

- o 협정 개정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국은 북한과 달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원칙이 확고함을 미 의회에서 강조함.
 - 미국의 경우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을 위해 의회 비준 필요
- o 양국 간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지만, 기 연장된 2년 안에 ‘호혜적,’ ‘선진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한국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함.

V. 정책적 고려사항

〈확고한 한·미 정책공조 유지〉

-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유된 대북정책 관련 정책공조의 확고한 유지를 통해 한·미가 일관된 대북정책을 견지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한·미 이간 전술을 차단하고, ‘남북관계 개선 없이 북·미 관계 진전 불가능’ 메시지 각인
 - 한·미 간 확고한 정책공조는 일본의 독자적 대북행동을 방지하는 데도 중요

- 굳건한 한·미 정책공조는 북한의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전략을 차단함과 동시에 미국의 ‘비핵화와 비확산 분리·추진’ 가능성을 견제할 수 있음.
 - 북한 비핵화의 달성은 비확산의 유지를 통한 결과이지만 이를 전술적으로 분리하여 추진할 경우 북한에 협상 지연 및 한·미 이간 전술의 가능성을 부여하므로 이를 각별하게 유의
 - 북한 비핵화 원칙을 철저하게 견지, 비확산과 비핵화를 분리 추진하는 접근을 차단

〈국제적 대북제재 연대 유지〉

- 한·미 정상회담에서 재확인된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보상 불가,’ ‘비핵화를 향한 행동 변화 없는 북·미 대화 불가’라는 대북 메시지가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적 대북제재 연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대북제재 연대 지속 참여에 미국의 역할이 중요
- o 또한 강력한 국제적 대북제재 연대의 유지는 중국이 대북 외교적 설득·압박 정책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명분을 제공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 로드맵 후속 협의〉

- o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추진 로드맵을 작성, 한·미 간 후속 정책협의를 통해 북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남북관계와 미·북 관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함.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 로드맵은 북핵문제, 미·북 관계 및 일·북 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등 ‘9·19 공동선언’ 핵심 내용들의 균형적 이행체계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한·미·중 전략적 협력체제 형성〉

- o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바,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유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중국 측의 확고한 이해와 지지를 획득하여, 한·미·중 3자 전략적 협력체제 구축을 추진함.
 - 한·미·중 3자 전략적 협력체제 구축은 정부 간 차원이 최선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1.5 트랙(track)부터 추진 가능
- o 한·미·중 3자 전략적 협력과 일본, 러시아와의 정책 협력을 통해 6자 회담 체제를 복원하여 ‘9·19 공동선언’ 이행체계를 재가동함.

〈한·미·일 3자 공조체제 부활·가동〉

- 최근 한·일 관계가 악화되었는바, ‘9·19 공동선언’ 체제의 복원 및 재가동을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 목표를 향한 한·미·일 3자 간의 굳건한 정책공조가 필요함.
 -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한·미·일 3자 정책공조 체제를 제도화
- 한·미·일 공조체제의 제도화는 한·미·중 3자 전략적 정책협력체의 구축을 추동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임.

〈한·미협력 기반 대북 고위급 대화 제의〉

- 북한의 행동 변화를 유인하기 위한 국제 제재연대를 유지하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가동을 위한 선제적 고위급대화 제의를 고려함.
 - 남북 고위급 대화의 의제는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선언 등 기존 남북 간 합의정신의 재확인 문제
 - 북핵문제, 5·24 조치, 개성공단문제 및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이산가족문제 등 남북 간 현안 문제

[부록]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

지난 60년 동안 한·미 동맹은 한반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그리고 점차 전세계의 안정, 안보 및 번영의 초석이 되어왔다.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합중국 대통령은 2013년 5월 7일 워싱턴 DC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60년간의 양국 간 파트너십과 공동번영을 기념하기 위해서 공동선언을 제시한다.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이 미래의 기회와 도전에 대응해 나갈 준비가 잘 되어있음을 확인한다.

한국전쟁 속에서 태동하고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한 한·미 동맹은, 안보 협력을 넘어서 정치·경제·문화·인적교류 분야에서의 폭넓은 협력을 바탕으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해 왔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 우정 그리고 공동의 번영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에 기초하고 있다.

지난 60년간 지켜온 한반도의 안정을 바탕으로, 우리는 한·미 동맹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linchpin)으로 기능하고, 21세기 새로운 안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동맹을 계속 강화시키고 조정해 나갈 것이다. 미국은 확장 억지와 재래식 및 핵 전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 사용을 포함한, 확고한 대한(對韓) 방위 공약을 재확인한다.

아울러, 올해는 한·미 FTA가 발효된 지 1주년이 되는 해로서 양국 관계에 있어 또 하나의 기념비가 되고 있다. 한·미 FTA는 양국의 파트너

십이 긍정적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동시에, 성장과 번영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한·미 양국의 의지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 주고 있다. 우리는 양국 간 교역과 투자 증대 등 한·미 FTA의 긍정적 성과를 평가하고, 에너지 부문을 포함, 양국 간 협력 및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할 잠재력이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한·미 양국은 한·미 FTA가 양국 경제 성장의 엔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한·미 전략동맹의 미래 발전방향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2009년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의 이행에 중요한 진전이 있었음을 평가한다. 우리는 한반도 구성원 모두에게 더 나은 그리고 더 안전한 미래를 만들고, 「공동비전」에 기초하여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한편, 비핵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 양국은 동맹에 기초하여, 박 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을 통하여 북한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토록 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반복되는 도발행위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함께 한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평화로운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6자회담 참가국들 및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다. 우리는 북한이 고립에서 탈피하고,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로부터 양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 노력과 함

계, 정보·감시·정찰 체계 연동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상호 운용가능한 연합방위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함께 하고 있기에, 북한이 그들 주민들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투자와 개선 노력을 기울이며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한·미 양국의 평화와 번영은 지역적 그리고 범세계적 안보 및 경제발전과 불가분으로 연계되어 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우리는 공동 도전에 대응하고, 동북아에서의 평화·협력 시대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한·미 동맹은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미국은 세계무대에서의 대한민국의 리더십과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한다. 우리는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도전에 대한 대응노력과, 청정에너지 개발, 에너지 안보, 인권, 인도적 지원, 개발지원 협력, 테러리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원자력 안전, 비확산, 사이버안보, 해적퇴치 등에 있어서의 협력증진 노력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60년간의 파트너십과 공동 번영을 통해 우리는 한·미 동맹의 힘이 양국 국민들 간 긴밀한 관계로부터 나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미국내 대규모 한인 사회는 한·미 양국 사이의 중요한 연결고리로서 뿐 아니라, 미국 사회에 많은 힘과 활력을 불어넣는 귀중한 기여를 하고 있다. 우리는 경제계, 시민단체, 학계, 기타 기관들 간 협력을 포함, 양국 사회 간 보다 긴밀한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과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다짐한다.

동맹국으로서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국가로서, 우리는 다가오는 세대를 위한 아시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

**<Joint Declaration in Commemorat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the Allian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six decades, the U.S.-ROK Alliance has served as an anchor for stability, security,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increasingly around the world. President Barack Obama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President Park Geun-hye of the Republic of Korea, meeting in Washington, D.C. on May 7, 2013, present this Joint Declaration in celebration of sixty years of bilateral partnership and shared prosperity. The two leaders affirm that the Alliance is well-placed to address th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f the future.

The U.S.-ROK Alliance, forged in the Korean War and founded on the 1953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Mutual Defense Treaty, has evolved into a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with deep cooperation extending beyond security to also encompass the political, economic, cultural, and people-to-people realms. The freedom, friendship, and shared prosperity we enjoy today rest upon our shared values of liberty, democracy, and a market economy.

Building on the past sixty years of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we continue to strengthen and adapt our Alliance to serve as a linchpin of peace and stability in the Asia-Pacific and to meet the security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The United States remains

firmly committed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through extended deterrence and the full range of U.S. military capabilities, both conventional and nuclear.

This year also marks another milestone for our two nations –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This agreement embodies the positive evolution of our partnership and demonstrates how deeply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are committed to a shared future of growth and prosperity. We are pleased to note the positive results of the KORUS FTA, including increased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our two countries, and recognize its potential for expanding bilateral cooperation and business opportunities, including in the energy sector. Our two countries will fully implement the KORUS FTA to ensure that the agreement serves as an economic growth engine in both our countries.

We are pleased with the significant progress made in realizing the 2009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which lays out a blueprint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our strategic Alliance. We pledge to continue to build a better and more secure future for all Korean people, working on the basis of the Joint Vision to foster endur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peaceful reunification based on the principles of denuclearization, democracy and a free market economy. In this context,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will continue to work through the Alliance to bring North Korea in to

compliance with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promote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through the trust-building process initiated by President Park.

We share the deep concern that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s programs and its repeated provocations pose grave threats to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Both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are determined to achieve the peaceful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are working with other Six-Party Talks partner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insist that North Korea adheres to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commitments. While we invite North Korea to take the path that leads out of isolation and to join the community of nations as a responsible member, we are resolved to continue to defend our citizens against North Korea's provocations by strengthening our comprehensive, interoperable, and combined defense capabilities, to include shared efforts to counter the missile threat posed by North Korea and integrated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systems. Because both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share a deep concern for the well-being of the North Korean people, we encourage North Korea to invest in, and improve, the conditions for its citizens and to respect their basic human rights.

The peace and prosperity of both our nations are inextricably linked to regional and global security and economic growth. Based on the solid U.S.-ROK Alliance, we are prepared to address our common challenges and seek ways to build an era of peace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he U.S.-ROK Alliance is an increasingly global partnership, and the United States welcomes the Republic of Korea's leadership and active engagement on the world stage, including in international fora. We will strengthen our efforts to address global challenges such as climate change and to promote clean energy, energy security, human rights, humanitarian assistance, development assistance cooperation, counter-terrorism,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nuclear safety, non-proliferation, cybersecurity, and counter-piracy.

Our sixty years of partnership and shared prosperity have demonstrated that the strength of our Alliance stems from the close relationships between our peoples. The large Korean-American community in the United States not only serves as a significant link between our two countries, but also makes countless contributions to the strength and vitality of American society. We pledge to continue programs and efforts to build even closer ties between our societies, including cooperation among business, civic, academic, and other institutions.

As allies and Asia-Pacific nations, we look forward to shaping together the future of Asia for generations to come.

통일연구원 회원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 연구총서, 정세분석보고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절
취
선

회원가입신청서				
성명		입금자 (입금일자)		
근무처				
	직위			
간행물 받을주소	(우편번호 :)			
연락처	전화		내선 전화	
	핸드폰		FAX	
	전자메일			
전공 및 관심분야				
회원구분	학생회원 () 일반회원 () 기관회원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 본 신청서를 보내주십시오.

(우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E-Mail: pcm@kinu.or.kr

※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한미정상회담 결과 분석

통일정세분석 2013-06

발행처	통 일 연 구 원
편집인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전화 : 02-901-2527 팩스 : 02-901-2543
인쇄처	(주)세원문화사 전화 : 02-2265-1141
인쇄일	2013년 6월
발행일	2013년 6월

K O R E A I N S T I T U T E F O R N A T I O N A L U N I F I C A T I O N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전화 : 900-4300(代)